



추경, 사업착수·자금배정 등 차질없이 집행 중, 지방보조사업 적기 추진 등 실집행 속도 높이기로

- 임기근 차관, 관계부처 합동 「제8차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
- 추경 신속집행 관리 대상(10.5조원) 47% 집행(4.30 기준, 잠정), 주요 사업의 신속한 추진 위한 사업공고·대상선정·자금배정·교부 등 사전 준비 완료
- 지방정부 자체 추경 신속 추진, 성립 전 예산집행 등 관련 제도 전면 활용
- 현장 중심 관리와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등 국민체감도 제고에 집중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4.30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제8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추경예산 집행현황과 향후 계획 및 '26년 본예산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였다.

* 참석: 재경부, 교육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기후부, 노동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국세청 등

정부는 중동 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민생 안정을 위해 총 26.2조원 규모의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확정하였다. 국회 통과(4.10일) 직후 추경 예산 집행계획을 수립(4.11일)하여 10.5조원을 신속집행 관리대상으로 지정 하였고 상반기 내 85% 집행을 목표로 부처별·사업별 추진계획에 따라 집행 하고 있다. 추경 예산 확정 이후, 사업공고·지방정부 등 관계기관 협의·자금 배정 및 교부 등 사전 준비에 즉시 착수하였으며 4.30일 기준(잠정) 5.0조원을 집행(47%)하여 신속한 이행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추경 집행이 본격화된 시점에서 지방보조사업의 집행상황을 중점 점검하고, 현장 지연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여 국민과 기업이 체감 하는 실집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재 지방정부는 자체 추경 편성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성립 전 예산집행 등 가용한 제도를 활용하는 등 추경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이번 회의 는 이러한 중앙-지방 협력을 바탕으로 ①서민·취약계층 등 국민 체감도가 높

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등의 사업과, ②본예산에 더해 추경으로 지원 규모가 확대된 무공해차 보조사업 등을 중심으로 본예산 집행 현황, 지방정부 재원여건, 사업 수요 및 배분계획 등 실질행 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우선, 서민층의 고유가 부담 경감을 위해 새롭게 도입한 ‘고유가 피해지원금(행안부)’ 사업은 추경예산 4.8조원 중 3.8조원(80.0%)을 지방정부에 신속히 교부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4.27일부터 신청·접수 중(4.27일~5.8일)이다. 그 외 70% 국민은 5.18일부터 2차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교통비 경감을 위한 ‘대중교통비 환급지원(국토부)’ 사업은 4월 대중교통 이용분부터 즉시 추가 환급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경예산 1,904억원 중 677억원(35.6%)을 지방정부에 교부하였으며, ‘무공해차 보급사업(기후부)’의 경우 시·도별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추경예산 1,500억원 중 825억원(55.0%)을 지방정부에 교부하는 등 지역별 재정여건 및 수요에 맞게 적기 집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외에도 ‘영화 관람료 할인지원(문체부)’ 5월 지급 개시를 위한 참여 영화관 접수완료(4.28), ‘수출 바우처(중기부)’ 추경예산 1,000억원 중 500억원(50.0%)을 집행(4.29)하는 등 사업별 특성에 맞추어 집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26년 본예산 집행현황도 함께 점검하여 ’26.4월말 기준(잠정) 공공부문(재정·공공기관·민간투자) 신속집행은 266.1조원(40.5%, 잠정), 중점관리사업은 16.3조원(47.3%)을 집행하는 등 안정적으로 재정을 집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임 차관은 “추경은 적시성 있는 집행이 핵심요인이며, 실집행까지 속도감 있게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으로 집행 상황을 끝까지 점검해야 한다”며, “특히, 지방보조사업은 지방정부의 재원 확보 등 지방정부와 협력이 중요한 만큼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 눈높이에 맞는 홍보와 현장 중심 관리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앞으로도 찾아가는 집행점검, 재정집행점검회의 등을 통해 집행현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수요자 의견을 지속 수렴하는 등 현장중심의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총괄>	기획예산처	책임자	과 장	김남희 (044-214-3270)
	재정집행과	담당자	사무관	이지혜 (misjuly@korea.kr)
			사무관	신형진 (hj8147@korea.kr)
			사무관	남동현 (totozl@korea.kr)
			사무관	한우리 (han1023@korea.kr)
			주무관	임종찬 (jongchan52@korea.kr)
담당 부서	행정안전부	책임자	과 장	김수경 (044-205-3702)
	재정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강민철 (kmc0608@korea.kr)
	농림축산식품부	책임자	과 장	정재환 (044-201-1311)
	기획재정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정세희 (jungsh1107@korea.kr)
	산업통상부	책임자	과 장	손용하 (044-203-5520)
	기획재정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황인택 (hit21@korea.kr)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박은정 (044-202-2320)
	재정운용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오상철 (chori73@kroea.kr)
	기후에너지환경부	책임자	과 장	박판규 (044-201-6880)
	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	담당자	사무관	강 찬 (kangchan@korea.kr)
	고용노동부	책임자	과 장	최영범 (044-202-7026)
	기획재정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김봉중 (bzang@korea.kr)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허경민 (044-201-3238)
	재정담당관	담당자	서기관	배운형 (masterkeator@korea.kr)
	중소벤처기업부	책임자	과 장	이하녕 (044-204-7320)
	재정운용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윤상준 (redragun@korea.kr)